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

전문공보관 김정진
전화 031-470-4421

보도자료

2023. 5. 23.(화)

제 목

임대주택 시행업체에서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차명 수수하고, 임대아파트 헐값 분양받은 경기도청 기술서기관 구속기소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 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 (제11조 제1항)

-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(부장검사 이진용)는 임대주택 시행업체에서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차명 수수하고, 임대아파트를 헐값에 분양받은 경기도청 기술서기관 A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 등으로 구속 기소하였음
- 현재까지 수사한 결과, A는 경기도청 민간임대주택 팀장으로 근무하면서,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진행 중이던 시행업체 회장 B, 대표이사 C로부터 신속하게 민간임대주택사업 인·허가를 받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, 구체적인 사업 진행 경과를 알려주거나 주택건설사업 승인과 관련한 인·허가를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대가로,
 - 시가 4,640만 원 상당 대용량 배기량의 할리데이비슨 1대를 차명으로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,
 - 시행업체가 일반분양을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민간임대아파트를 차명으로 임대분양가(4억 800만 원 상당)에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억 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높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았음
- 검찰은 지방직 건설 인·허가 담당 공무원들의 부패범죄 수사를 계속 진행하여 엄단 할 것임

1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1 피고인

- A(56세, 4급, 現 경기도청 기술서기관)

2 공소사실 요지

-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진행 중이던 시행업체 회장 B, 대표이사 C로부터 신속하게 민간임대주택사업 인·허가를 받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, 구체적인 사업 진행경과를 알려주거나 주택건설사업 승인과 관련한 인·허가를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대가로,

※ 위 시행업체의 민간임대주택사업은 A의 도움으로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신속히 진행되어 착공되었고 현재 공사 진행 중임

- '19. 6.경 시가 4,640만 원 상당 대용량 배기량의 할리데이비슨 1대를 차명으로 수수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
- '21. 4.경 시행업체가 일반분양을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민간임대아파트를 차명으로 임대분양가(4억 800만 원 상당)에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억 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높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아 뇌물수수



2 사건 진행 경과

- '23. 2. 2. 국무조정실 수사의뢰
- '23. 3. ~ 4. A 등의 경기도청 사무실·주거지 등 압수수색 및 관련자 조사
- '23. 5. 4. A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
- '23. 5. 23. A에 대한 구속기소

3

수사 의의

● 초고가의 뇌물을 버젓이 요구한 지방직 공무원의 부정부패행위 엄단

- 과거 뇌물 사건은 시행업체가 공무원에게 금품 로비를 하는 방식이라면 본건은 지방직 공무원이 시행업체에 취미를 위한 할리데이비슨과 시세 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아파트를 분양해달라고 대놓고 요구한 금품 요구형 뇌물범죄임

※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수수할 당시 일반분양이 종료되어 일반인 들은 분양받을 수 없었고, 시세는 약 9억 원 상당으로 분양가(4억 800만 원 상당) 대비 4억 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었음

- 특히, 공무원으로서 민간주택사업 인·허가의 지연으로 사업좌초 위기에 있었던 시행업체 직원을 데리고 여러 할리데이비슨 매장을 쇼핑하며 최고가 한정판 모델을 사달라고 지목하는 등 도덕성 타락이 매우 심각한 지경이었음

● 뇌물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차명을 이용한 지능적 범행 규명

- 한편, 범행 은폐를 위해 할리데이비슨 수수 당시 시행업체 대표이사 C의 지인 명의를 차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이 적발되자 할리데이비슨을 오토바이 면허도 없는 명의대여자에게 돌려준 다음 빌린 것이라고 허위주장하였고,
- 4억 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던 시행업체 보유 임대아파트 역시 차명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자신은 그 아파트를 전대 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외형을 갖추 범행을 은폐하였던 지능적인 범죄를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규명함

4

향후 계획

- 검찰의 이번 수사를 통해 지방직 건설 공무원들의 부패범죄가 나날이 과감해지고, 지능화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, 계속 수사하여 엄단 할 것임 ☑